



# 강의평가제의 바람직한 방향

최재웅 | 고려대 교무처장

## I. 서론

국내 대학에 강의평가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도 후반이었고, 본격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시행된 것은 1990년도 중반부터였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시대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것이었든 아니면 능동적으로 합리적 합의 절차를 거친 것이었든 몇 년 사이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의평가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강의평가제와 관련한 지금의 논의는 도입 여부의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대체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그 일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 때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강의평가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강의평가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또는 왜 그런 목표를 설정하였느냐에 따라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평가제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강의평가제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점검해 가면서 강의평가제의 바람직

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 보기로 한다.

## II. 강의평가의 목표 및 장점

강의평가는 크게 두 가지 목표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루자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강의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강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자는 것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의 강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의 수월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수의 학문적 바탕 및 강의 능력이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학문적 바탕은 채용시나 승급, 승진시에 계속하여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독려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되고 또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반면 교수의 강의 능력은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경우도 국내에서는 드문 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는 데 강의평가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강의평가의 또 다른 목표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데 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피교육자의 권리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평등의 개념이 확산되고 자본주의 논리가 우세해지면

서 학생을 소비자라 인식해야 한다는 풍조가 확산되자, '소비자로서의 학생'의 강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따지듯이,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 강의의 품질을 따져보자는 목적에서 강의평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인 학생들의 알권리가 크게 강조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움직임 및 이로 인해 도입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교사나 강사들이 강의 내용이나 강의 방식에 부쩍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 III. 강의평가의 당위성

강의평가의 목표나 도입으로 기대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논리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그중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봄에 강의평가의 당위성을 논하기로 한다. 가장 큰 우려는 무엇보다도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과연 평가자로서의 신뢰성과 성실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우선 신뢰성 문제부터 살펴보자. 평가자가 이성적,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에 응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강의평가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되기 쉽고, 그러한 인기투표가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은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즉, 인기투표가 참여자의 합리적 이성보다는 가벼운 감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사회속에서의 교육기관이라면 그와 같은 인기투표적 성향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선거가 그러하고,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장 선거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인기에 영합한다 해서

대통령 선거나 총장 선거를 당장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듯, 인기투표 성향이 있다 하여 강의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은 그보다 나은 대안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인기투표화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끊임없는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다. 강의평가 내용이나 절차의 개선을 통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감성의 거품을 최소화하고 평가자의 합리적, 건설적 이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학생들이 강의평가에 임할 때 극단적으로 인기투표 성향을 보일거라는 일반적인 우려도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자로서 학생들의 신뢰성과 함께 우려되는 것은 평가자로서의 성실성이다. 즉 학생들이 강의평가 자체를 귀찮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할 경우가 적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는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보인다.

"강의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반영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라고 답한 학생이 38.1%로 가장 많았다. 강의평가의 활용 여부도 알 수 없게 하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을 보여주는 결과다. 30.4%의 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답해 공개되지 않는 '강의평가' 시스템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을 지적하는 의견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대신문 1417호, 2001. 12. 28일자, 이하 인용도 모두 같은 기사에서 따옴)

위의 기사에 따르면,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불성실함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강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설문 기법이나 통계 기법 등을 활용하여 학생별 강의평가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학생별 성실도를 해당 학생의 강의평가에 반영하면, 불성실한 강의평가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강의평가에 대한 또 다른 우리로 강의평가 결과가 때로 교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는 학교 당국이나 그 이상의 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1970~80년대 교수제임용제도가 합당치 않은 이유로 제안이나 상급자의 '눈 밖에 난' 교수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데 사용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강의평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강의평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강의평가가 없다고 교수 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악용 가능성은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결과를 왜곡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음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의평가를 반대하는 논리로 제기되는 세 번째 근거로 동양적 정서가 있다. 제자가 스승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동양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선 강의평가가 교육의 근본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받아들인다. 이러한 정서나 윤리는 아마도 스승은 완성된 인격체인 데 반하여 제자는 아직 미완의 인격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리 자체가 도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소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격적 완성도의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고 논의를 전개해 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강의평가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이는 '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스승상'을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제자들에 의한 평가가 올바르게 못하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스승들끼리라도 서로 강의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외국 대학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교수의 강의에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될 경우, 학장이나 학과장이 교육관계 전문교수에게 해당 강의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안이다. 그리고 학장은 그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교·강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강의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학생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교·강사나 학교측에 요구된다. 특히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쉽게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은 중요해진다. 즉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진단'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하튼 만일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가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강의평가를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동료에 의한 평가라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방식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의 평가 못지 않게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런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동양의 전통 윤리를 앞세운 강의평가제 반대 역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진작부터 교수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도 추진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강의의 질을 높이려는 체계적인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제에 대한 반대의 명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강의평가에 대한 반대를 관철하는 데는 또 다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대규모로

“

만일 제자들에게 의한 평가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스승들끼리라도 서로 강의의 수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진작부터 교수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도 추진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

쌍방향 의사소통이 쉬워진 까닭에, 강의평가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강의평가는 꽤 대규모 작업으로, 전 같으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성사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설문 조사가 가능해진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가 강의평가를 하건 하지 않건 이제는 학생회 같은 조직도 주도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가 거세진다면,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얻어 강의평가가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3년전 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던 바 있다. 만약 이처럼 강의평가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할 경우, 경험 부족 등으로 그러한 평가행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학교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욕구의 적절한 분출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V. 강의평가의 조건

현재 학생 집단이나 일반이 요구하는 강의평가의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학생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 평가가 되어야 한다.
-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그 결과가 인사나 급여에 반영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며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해 보자. 강의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교수에게 잘못 보여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학생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강의평가지 해당 교수가 그 평가를 직접 주재하여 진행한다면, 또는 강의평가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가 곧바로 교수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기 어렵다. 게다가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담당 교수나 강사가 강의 평가지에 들어 있는 작성자의 필체를 바탕으로 작성자를 알아낸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이런 환경에서의 강의평가는 더 이상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강의평가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어야 제대로 된 강의평가가 가능해진다. 익명성은 물론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흔히 드러나

는 익명성의 부작용, 즉 익명으로 하는 악의적 언행 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부작용은 강의평가를 평가할 때 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가의 평가 문제, 즉 평가의 반영 문제는 뒤에 더 논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익명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강의평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평가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인용해 보자.

“물론 현재의 온라인 ‘강의평가’ 형식은 대부분의 본교 구성원들이 반기는 분위기. 교양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모 강사는 “선생님이 앞에서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서면 강의평가가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강의평가가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기 때문에 훨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실에서의 평가 행위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는 우선 평가자의 필체 등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작성시 주위의 급우나 감독자를 신경쓰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인터넷이 오히려 작성자를 추적하기 쉽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점에 대하여 평가 집행기관인 학교가 악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러한 점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지한다면, 그러한 불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입력의 전산화는 또한 평가 결과 분석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알아서 작성하도록 하는 인터넷 평가 방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참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역시 일부 대학에서처럼 성적 열람 등과

연계시킬 경우 참여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

앞에서 강의평가의 두 번째 조건으로 평가에 임하는 평가자의 성실성을 들었다. 성실성은 강제로 성취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아무리 누가 옆에 지켜서서 감독을 한다 해도 평가 행위의 성실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평가자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통계기법이나 문항작성 기법들을 활용하여, 평가의 충실성이나 성실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이를 평가의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평가자인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계몽활동을 통해, 자부심을 갖게 하고 평가에 임하게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성실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해 갈 수 있다.

앞에서의 첫 번째 인용에서 보이듯이, 학생들의 경우도 자신들의 성실성 부족 문제를 강의평가의 장애 요소로 꼽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은 일부 반대의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학생들이 성실성 부족을 자신들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성실성이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 자신들이 느끼는 우려가 곧 스스로에게 불성실해지려는 경향에 대한 하나의 억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릇 여러 사람이 우려하는 행동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견제장치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평가자로서의 학생들의 성실성은 충분치는 못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인 실질적 평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평가 문항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특히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교육학자나 설문조사기법 전문가들의 분석 및 조언을 통해 바람직한 평가 항목이 계속하여 개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설문

“

이러한 업적 반영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의평가 결과값 직접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많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료 교수에 의한 평가도 그 한 예가 될 것이고,

또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해당 교수에게 적합한 교수방법 보완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

의 비율 문제, 주관식 설문 결과의 해석 문제 등등 설문 내용 및 그 결과가 해당 과목의 강의 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로 내건 조건인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 문제는 학생들 쪽에서는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앞서 인용된 글의 다른 부분을 보자.

“강의평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반영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라고 답한 학생이 38.1%로 가장 많았다. 강의평가의 활용 여부도 알 수 없게 하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을 보여주는 결과다.”

강의평가의 활용 여부나 반영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경청할 면이 있다. 실제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영되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강의평가의 목표로 강의의 수월성 제고와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 보장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강의평가 결과가 대부분 해당 교·강사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전자적 목표에는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로 보인다.

그런데 강의평가의 완전 공개는 폭발력을 지닌 사안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체면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점에서 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외부에 공개된다는 것은 자칫 체면 손상으로 직결될 수 있고, 이는 당사자에게나 그 주변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평가 결과의 공개는, 비록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회피하기 어려운 추세라 할지라도 아직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즉 필요성이 입증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수준만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가 결과의 공개가 자칫 특정 교수나 강사에 대한 공개제판 형식으로 진행되더라도 한다면, 본래의 취지인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정적인 측면으로 호를 위험이 다분히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평가를 공개한다 해도 특히 주관식 문항의 경우, 지나친 표현 등은 순화시키거나 삭제시켜 내보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평가자의 생생한 육성을 왜곡한다는 우려는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지나친 내용이나 언행이 들어있는 글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평가의 조건으로 마지막에 열거한 평가의 반영

문제 역시 꽤나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평가자로의 학생들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성실성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그 평가를 그대로 직접 업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문성이나 신뢰성에 일정 한계가 있는 집단의 평가를 그대로 공인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칫 인기투표의 위험도 없지 않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설령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일정 수준 조정하여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것이 일부 스포츠 종목의 채점에서처럼 동일 항목에 대한 양극단의 점수를 배제하고 나머지로 평균을 내는 방식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되든 매우 섬세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일부 대학에서처럼 직접 많은 비율로 반영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교·강사가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사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는 반대로 반영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 식이 된다면, 이는 동기 유발에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 강의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 반영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의평가 결과를 직접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많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동료 교수에 의한 평가도 그 한 예가 될 것이고, 또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해당 교수에게 적합한 교수방법 보완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또는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훌륭한 교수·강사 선정' 같은 장려책을 쓸 수도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당위성 및 조건 등을 중심으로 강의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강의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 논리가 대안의 부제라는 중요한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강의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강의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의평가의 본래 목표인 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양대 축을 기준으로 그것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평가를 구성하고 절차를 정비하고, 또한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자 동시에 소위 지식인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강의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무서운 평가자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성찰을 통해 그러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최재웅

서울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어영 문화학을 마친 후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 언어과학과 교수 및 교무처장으로 재직중이다. 주로 의미론 및 화용론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전산언어학적 연구방법도 일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